

이재명, 대선후보 첫 일정 SK하이닉스… ‘경제·통합’ 강조

AI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 가져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의견 청취

현충원서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지금 당장 급한 것 ‘국민 통합’”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내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과노정(왼쪽 다섯번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나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것이 기업 활동

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그 중에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가장 중요 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흑역라도 큰 타격없이 세계를 주도해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력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그문제도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비공개 (회

의)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염두해둔 행보로 이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

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물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소득 공백” vs “기업 부담”… 정년연장 합의점 찾아야

민주당, 고령자고용촉진법 발의
사업장 여건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경제계, 기업경영에 부담 작용 가능성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와 고령층의 추가 고용으로 늘어날 ‘기업 부담’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퇴직근로자 재고용을 선택하게 하고 임금체계·근로기간을 개편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박홍배, 박정, 이수진, 김주영, 한정에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

령을 맞추려고 했다. 정년 연장 시행일 부터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 법안들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 시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건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안과 달리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

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경제계는 연장한 정년을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가 수행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2023년)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별 특성,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한 국민의힘… ‘리버스 2007’ 비판

제대로 된 어젠다 없이 이재명 공격뿐
단일화 이후로 이재명 대세론 넘여야

국민의힘이 28일 대통령선거 2차 경선 당원투표·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정치권에서 ‘예선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덕수 단일화론’ 때문이다.

만일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 나서도 문제다. ‘이재명 대세론’을 넘여야 한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신세라는 한탄이 나온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孤島)에서 대선 치르는 거 같다”며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거 같다”고 적었다.

홍 후보가 말한 ‘2002년 노무현 대선’과 ‘2007년 정동영 대선’은 당시 민주진영의 후보가 겪은 정치적 상황을 뜻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후보에 선출됐으면서도,

당내 단일화 여론에 시달렸어야 했다. 한일월드컵 이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인기가 높아지고, 새천년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엔 ‘후보단일화협의회’까지 생기며 노무현 후보를 압박했고, 노 후보는 단일화에 응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단일화에 이긴 노 후보는 ‘이회창 대세론’을 꺼고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2007년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 참여정부에 가해지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노무

현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열린우리당 및 민주계열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 여기 경선에서 선출된 인사가 정동영 후보였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민주진영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의혹만 이야기하기 바빴고, 이는 오히려 ‘이명박 대세론’을 굳혔다.

그러니 ‘나는 2002년 노무현’이라고 말한 것은 홍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할 경우, 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의혹을 들춘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공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리버스(reverse) 2007’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대세론’이 강했던 시절, 대통합민주신당은 제대로 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BBK 의혹 등을 언급하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을 막을 사람은 나’라고 주장한다. ‘한덕수 대세론’ 역시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찾기 힘들자 제기된 것이다. 대선 이슈의 중심이 이 후보인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론’을 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굳힐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